

# 사람중심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문국현의 100대 약속

-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창조한국당 17대 대통령선거 문국현 후보 공약집



사람이 희망이다  
창조한국당

##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민생을 안정시켜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빠른 속도로 전락하고, 청년실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과 대부자금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중소기업인들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창조한국당은 민생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100대 공약을 만들어 17대 대선공약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입국〉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중심 사회, 창조경제, 학습국기를 모토로 사람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은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좋은 일자리 대량창출,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희망의 공동체 구현을 우리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재창조를 목표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재창조〉, 학습을 통한 세계화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 재창조〉, 기회가 균등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재창조〉,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한 〈사회 재창조〉, 끝으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하여 〈한반도 재창조〉를 국정전략으로 할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토건중심의 개발정책 등 기존의 성장 전략으로는 심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경제 운용의 방식을 사람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키워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비전을 가지고 500만 일자리 창출, 8% 경제성장, 중소기업 경쟁력 2배, 부동산 가격안정, 건설비리 척결,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등의 핵심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약의 완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지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창조한국당의 정책공약들을 마련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책자문단의 교수님들과 정책위원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 원 배

## 500만개의 평생일터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창조한국당 제 17대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 33년간 기업인으로서 받았던 국민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뒤로 하고 '정치의 광야'로 나왔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200만 청년 실업자들의 목소리가 저의 등을 떠밀었고, 850만 비정규직의 애타는 눈빛이 저를 이 거친 선거전으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부패한 가짜경제'를 청산하라는 時代精神이 저 문국현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대선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거품과 고용 없는 성장의 가짜경제'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사람중심의 창조적 진짜경제'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국민적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12월 19일은 망국적인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고 한국 사회에 '깨끗한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문국현이 반드시 그 '희망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2,000만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살리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면 8% 성장과 5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수 있는 철학과 전략과 방법론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시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단지 자신들을 위한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저 문국현은 국민을 위한 '500만개 일자리' 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틀 전 국민여러분께 바치는 10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고자 수백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숭한 밤을 새워 토론해 완성한 '국민과의 약속' 입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 을 꿈꾸는 그분들과 함께 '국민의 숲' 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해방 후 60년을 창조적으로 재출범시키는 2008년 체제의 大長征을 시작합니다.

'창조적 미래세력' 은 時代精神이 함께하기 때문에 삭풍이 몰아치는 한국 정치의 들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하여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 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25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 **문 국 현**



## 국정 비전

### 사 랫 입 국

사람중심 사회, 창조경제, 학습국가  
사람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은 나라

## 국정 목표

1. 좋은 일자리 대량 창출
2.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3. 희망의 공동체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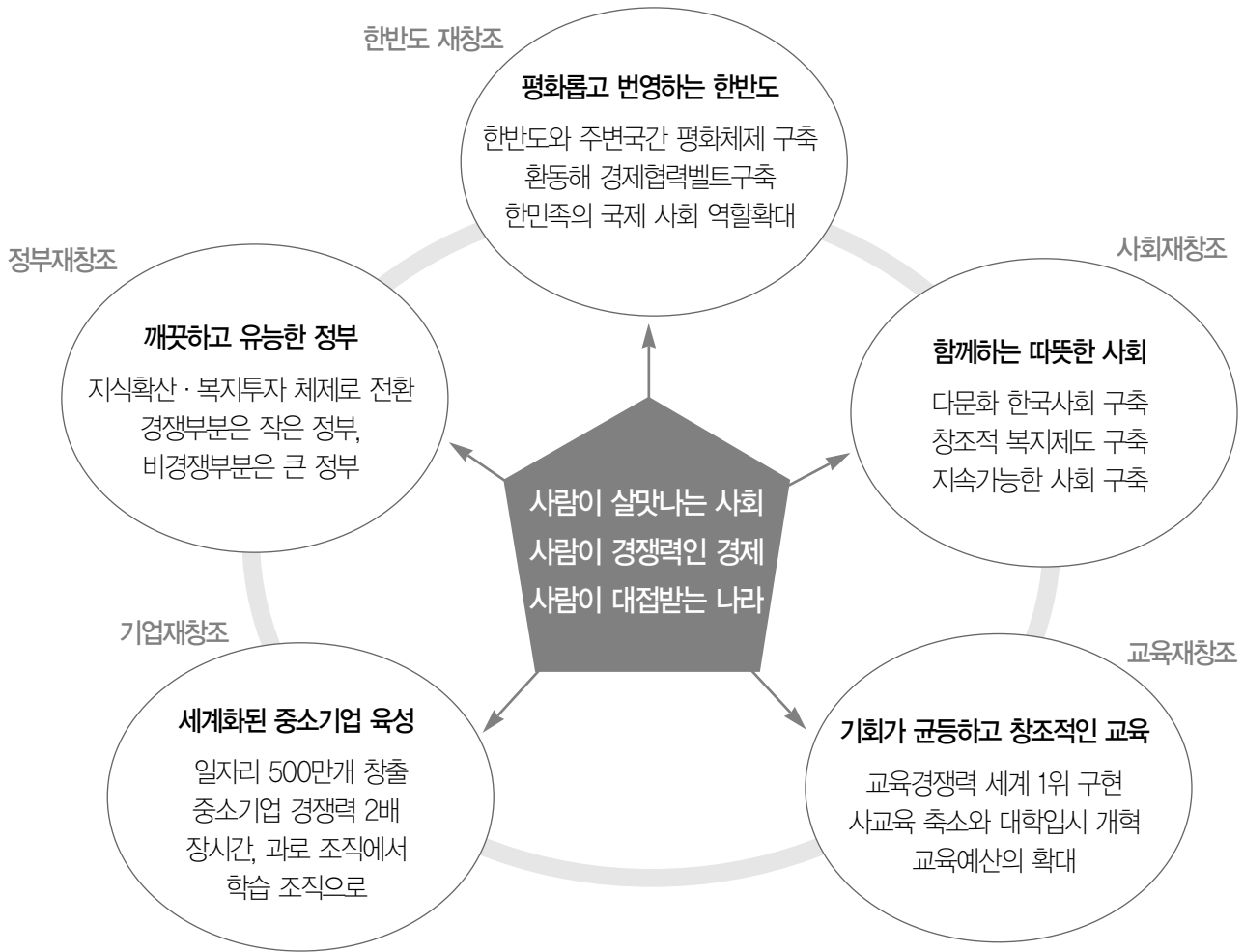
## 국정 전략

### 대 한 민 국 재 창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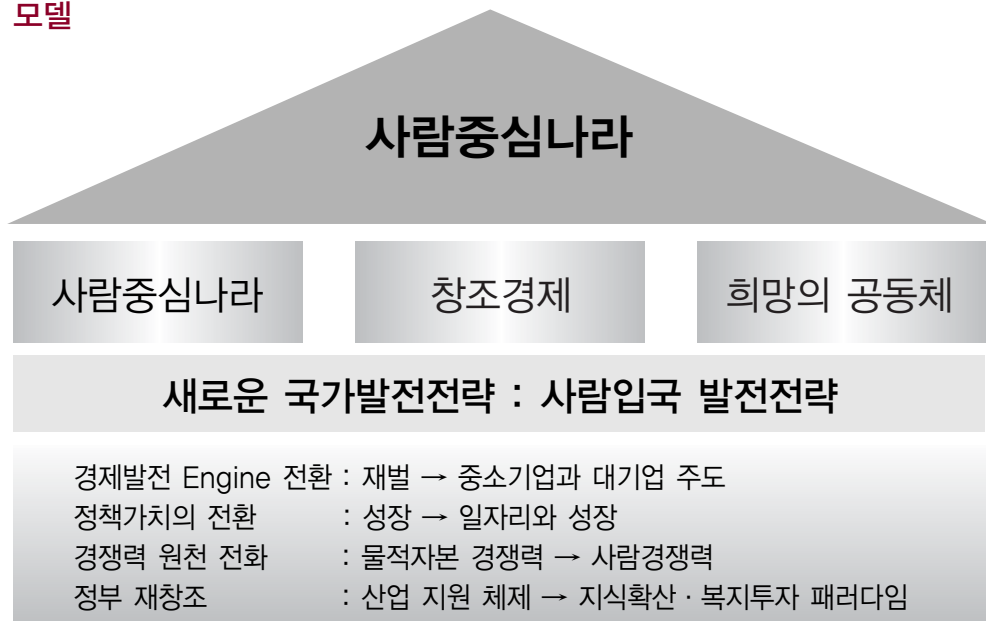
1. 정부 재창조 :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2. 기업 재창조 : 학습을 통한 세계화된 중소기업
3. 교육 재창조 : 기회가 균등하고 창조적인 교육
4. 사회 재창조 :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5. 한반도 재창조 :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사람중심의 대한민국 재창조 체계도 : 분야별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입국 발전 모델



##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

### 1. 창조정부 수립

: 사람의 창의성을 높이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실현

### 2. 사람중심경제 실현

: 창조경제-협력경제-청정경제 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3. 신뢰사회 구축

: 원칙이 통하고 부패 없는 사회

### 4. 지방분권 다극발전체제 확립

: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 5. 중소기업 중심 발전

: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중소지식기업 주도 지역경제발전

### 6.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 동아시아 중추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통한 세계화



**7. 창조적 공교육체제 구축**

:누구에게나 열린 창조적인 공교육 기회의 보장

**8. 창조문화를 통한 문화대국 건설**

:창조적 문예진흥과 다문화의 공생을 통한 문화대국 건설

**9. 보편적 복지와 복지공동체 실현**

:육아·양로·교육·의료 서비스를 국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책임

**10. 생태적 기적 실현**

:녹색기술과 환경친화적 일터와 삶터로 삶의 질 향상

**11. 보편적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없는 가정, 직장, 사회 구현으로 여성의 잠재력 극대화

**12. 창조적-생태적 도농상생 체제 구축**

:창조도시와 생태농업간의 도농상생체제 구축

# 공약 목차

## 경제 · 일자리

“중소기업과 사람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    |
|----------------------------|----|
| 1. 500만 개 일자리 창출           | 16 |
| 2. 8% 경제 성장 달성             | 19 |
| 3.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 22 |
| 4.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25 |
| 5.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28 |
| 6. 건설비리 척결                 | 30 |
| 7. 조세제도 개혁                 | 33 |
| 8. 재벌 개혁                   | 35 |
| 9.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38 |
| 10. 금산분리 유지 및 강화           | 39 |
| 11. 금융감독 정책의 혁신            | 41 |
| 12.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43 |
| 13. 사회적 합의하에 FTA 추진        | 44 |
| 14.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 45 |
| 15. 사회적 대타협 추진             | 46 |

## 교육

“균등한 교육기회와 창조적 교육을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    |
|-------------------------|----|
| 16. 교육경쟁력 세계1위 달성       | 48 |
| 17. 사교육의 대폭 축소          | 51 |
| 18. 대학입시제도 개혁           | 52 |
| 19. 교원사회 경쟁력과 신뢰제고      | 53 |
| 20.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 54 |
| 21. 글로벌 환경에 부합한 교육 강화   | 55 |
| 22. 교육자치의 실천            | 56 |
| 23. 산학연계형 직업중심대학 육성     | 57 |
| 24. 국민의 영어 및 국제 언어능력 향상 | 58 |
| 25. 평생 학습기반 구축          | 59 |

## “사람중심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문국현의 100대 약속”

### 복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                          |    |
|--------------------------|----|
| 26.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강화       | 62 |
| 27.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63 |
| 28. 보건의료 정책 강화           | 67 |
| 29. 산업안전보건 정책 강화         | 69 |
| 30.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정책의 혁신 | 71 |
| 31. 아동 정책의 강화            | 72 |
| 32. 국가책임의 보육 정책 강화       | 73 |
| 33. 신 빈곤 정책 추진           | 74 |
| 34.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      | 75 |

### 통일 · 외교 ·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                              |    |
|------------------------------|----|
| 35. 대북평화실리정책 추진              | 78 |
| 36. 동북아 경제 · 안보 협력 강화        | 80 |
| 37.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 81 |
| 38.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82 |
| 39. 군복무기간 단축                 | 84 |

### 여성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는 평등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
|--------------------------|----|
| 40.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 86 |
| 41.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의 사회화   | 87 |
| 42. 여성할당제 강화             | 88 |
| 43. 여성들간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   | 89 |
| 44.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 보장      | 90 |

# 공약 목차

## 문 화

“창조적 지식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다문화사회의 아시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    |
|--------------------------------|----|
| 45.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사업 전면 추진      | 92 |
| 46. 전통사상과 학문에 바탕한 인본주의 기풍 진작   | 93 |
| 47. 지역별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         | 94 |
| 48. 아시아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설립          | 95 |
| 49. 남북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통일문화 환경조성    | 96 |
| 50.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추진          | 97 |
| 51.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의 체계적 추진 | 98 |
| 52. 다문화 한국사회의 구축               | 99 |

## 과학기술

“창조적인 이공계 인재양성,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응용 능력의 배양으로 창조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                                |     |
|--------------------------------|-----|
| 53. 과학기술 육성과 이공계 기피 해소         | 104 |
| 54. BT, IT 등 첨단융합 기술강국 추진      | 106 |
| 55.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 107 |
| 53.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육성체계 구축         | 108 |
| 57. 50만 IT 청년인력 해외 진출 지원       | 109 |
| 58. 과학기술인 중심의 기초과학 투자 확대       | 110 |
| 59. 사람중심·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 전환       | 111 |
| 60. 과학기술인력 활용체계 구축             | 112 |
| 61. 대·중소기업, 지역과 세계의 기술개발 협력 강화 | 113 |
| 62.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 114 |

## 국토·환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     |
|------------------------------|-----|
| 63. 환경관련 정부조직 및 행정체계 개편      | 116 |
| 64. 국민 보건환경 개선               | 117 |
| 65. 식품 안전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 119 |
| 66.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120 |

## “사람중심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문국현의 100대 약속”

|                            |     |
|----------------------------|-----|
| 67. 자원 재활용을 적극 확대          | 121 |
| 68. 친환경적 지역 개발             | 122 |
| 69. 북한 및 동북아 지역 환경 개선      | 123 |
| 70. 환경 일자리 창출              | 124 |
| 71.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        | 125 |
| 72. 대형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대선 공약 금지 | 127 |

### 에너지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                            |     |
|----------------------------|-----|
| 73. 다각적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 130 |
| 74.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      | 131 |
| 75.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정적 확보 | 133 |
| 76. 신·재생 에너지개발 및 보급 확대     | 134 |
| 77. 동북아 및 남북 에너지 협력의 추진    | 135 |
| 78.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 136 |

### 농림·해양

“국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창조하겠습니다.”

|                           |     |
|---------------------------|-----|
| 79. 상생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       | 138 |
| 80.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 141 |
| 81.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 142 |
| 82. 남북농업 협력 강화            | 143 |
| 83. 농정추진체계의 개혁            | 144 |
| 84. 해양 2050 정책 추진         | 145 |

### 사법·인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
|-------------------|-----|
| 85. 올바른 로스쿨 정책 추진 | 148 |
| 86.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49 |
| 87. 경찰 개혁         | 150 |
| 88. 군인 인권보장       | 151 |

# 공약 목차

|                 |     |
|-----------------|-----|
| 89.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 152 |
| 90.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 154 |
| 91. 인권외교 강화     | 155 |

## 정부 재창조

“창조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사람입국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
|--------------------------|-----|
| 92.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 158 |
| 9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    | 160 |
| 94. 국가 재정제도 혁신과 예산배분 효율화 | 161 |
| 95.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 정착      | 162 |
| 96. 세계화, 지방화로 지역경쟁력 재창출  | 163 |
| 97. 공기업 책임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   | 164 |
| 98. 공직부패의 추방             | 165 |
| 99. 감사원 개혁               | 167 |

## 개헌

“선진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                        |     |
|------------------------|-----|
| 100.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 170 |
|------------------------|-----|

# 경제 · 일자리\*

 “중소기업과 사람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500만 개 일자리 창출

### “일 년에 100만 개씩 5년간 500만 개 일자리 창출”

#### □ 현안 진단

“한국 경제는 낡은 경제, 가짜 경제 속에 있어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로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 고용률은 63.8%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8%
-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 자영업자의 좌절
- 가짜 경제하에서는 고용없는 불균형 성장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의 투자 제고
- 대규모 토목 공사는 미봉책 구시대의 잘못된 유산

##### ● 500만 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OECD 일류국가 수준의 70% 고용률을 달성하기에 필요
-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 특히, 청년 · 여성 · 노인을 위한 대량의 일자리가 필요

#### □ 비전과 전략

“일자리 9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살려 선진국 독일이 선택한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로 나아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 국정 최고의 목표로 설정

- 매달 일자리 체크,
- 실업률은 물론,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비중을 뜻하는 고용률을 중시

#####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소득증대로 내수시장 확대
- 수출고속도로 확보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장기과로 체제의 해소와 학습형 일자리 창출

- 교대제 확대 개편 유도
- 중소기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학습고속도로)
-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혁신

### ● 특허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 ● 여가 및 문화 산업의 기능 다양화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

#### □ 주요 정책

### ● 일자리 특별법 제정

- 일자리 자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여
-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 유도
- 통합고용서비스 지원

### ●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

-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단기대책은 정부투자/지원방식, 장기대책은 신산업정책/기업자율방식으로 역할구분

### ●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 확대전환을 위한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 평생학습조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 공급
-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금을 활용

### ● 해외 인력 진출 확대

-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편
- KOICA 확대 개편

###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5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산 5.1조원(연간) 조달 방안

-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 약 1.6조원
- 사회·교육·문화를 증대하여 1.5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  
(사회·교육·문화분야 예산은 44.9%에 불과 OECD 평균 70.2%에 크게 떨어짐)
- 2조원 : 고용보험기금
  - ※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사업(2006년) : 약 1조 6천억

● '05년 총 1조 4,036억 원의 재정을 투입

-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약 46만 명에게 직업훈련 및 연수, 일자리를 지원

## 8% 경제성장 달성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합니다”

### □ 현안 진단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인해 민생이 어렵고,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합니다.”

-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가중, 소득감소 등 민생경제 피해
  -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대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
  - 아기 울음소리 그친 농촌
- 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등
-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의 일자리 100만개 감소, 비정규직(850만), 청년실업(200만) 증가
- 천민자본주의의 팽배
  - 부패해도 돈만 벌면 유능하다는 생각
  -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회
  - 부패는 성장의 적
    - :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모두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 때문에 선진무턱에서 좌초
- 낡은 경제의 패러다임
  -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낡은 패러다임이 문제
  - 과로체제의 경제
  - 감동경영의 기회 상실
  - 근로자의 손과 발이 바쁜 과로경영을 경영자의 머리와 마음이 앞선 지식경영으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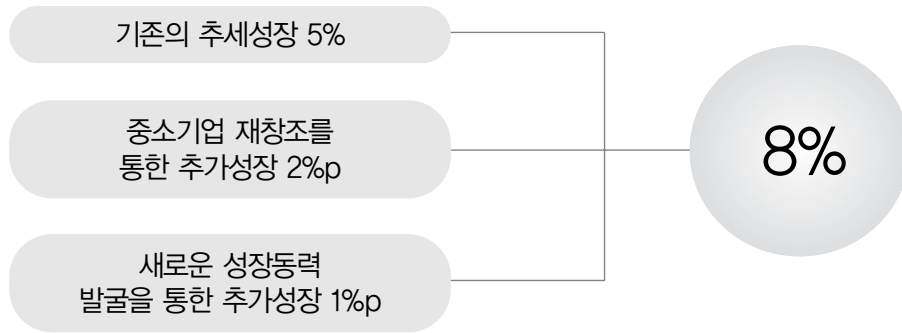
### □ 비전과 전략

“8% 성장은 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요 정책

“토건중심·재벌중심의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지속성장이 가능한 사람 중심·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달성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8% 성장의 내용



-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한 추가성장: + $\alpha$
-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 한계점에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변질, 이제는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의 원동력을 요구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과로체제 해소
  - 연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 후 선진국의 2/3수준
  - 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 : 산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고통도 절감
- 학습체제 구축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 : 자금난과 대기업에 예속되어 운영되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원천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만드는 정책
- 디자인 / 문화 / 브랜드가치 제고
  - 결합과 재결합의 지혜: 전통과 한류와 미래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관료화된 대기업보다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유망한 분야

## ● 정부 재창조

### ■ 정부효율성 제고

-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구현: 권력을 자기발전하려는 ‘규모의 경제’ 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적용하는 맞춤형 ‘밀도의 경제’ 를 추구하는 정부
- 사람중심의 겸손한 정부: 적재적소의 인재육성과 인재 활용을 통해 관료체제 탈피

### ■ 개발 · 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

### ■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 · 복지의 확대

## ●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 ■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 · 미수교

- 북한산의 원산지 인정 확보

### ■ 남북 · 미 · 일 · 러를 묶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미국의 시장, 일본의 대북한 보상
- FDI 200억 달러 이상 유치

##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 비전과 목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입니다.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중소기업 시대를 열겠습니다.”

- 경쟁력 2배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 건설
  - 학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 2배 향상
  - 수출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현 32%에서 60%로 향상
  - 금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직접금융을 위해 중기전용 주식시장 육성, 중소기업 특성화 은행으로 국책은행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로 중소기업부 신설,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의 일반경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들의 하도급 상생관계 형성
  - 정보인프라로 중소기업 전용방송 설치
  - 법률인프라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원청사의 사용자적 책임 강화

### □ 추진 전략

“기술개발 외에 기술의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지원하며, 대기업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기타 제반제도의 개선을 이룩할 것입니다.”

- 기술의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 지원
  - R&D 지원과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전문가육성 지원간의 균형추진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현장장인의 지원
- 선택적 직접지원 방식에서 경쟁적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들 간의 혁신경쟁 중시: 경쟁과 도전을 위한 지원강화

- 특정 업종과 특정 기업군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WTO 시대에 직접 보조금 금지 원칙에도 위배
-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지만 중소기업들 간에는 경쟁을 통해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칙이 필요
- 섬유산업도 이태리와 같이 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재창조되면 가장 첨단산업이 될 수 있듯이 사양 산업과 첨단산업을 이원화해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음

### ●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

- 기존 중층적 하도급관계의 다단계 통합 및 독립적 시장개척 지원
- 제조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학습컨소시움을 확대해서 업종별 네트워크 경제를 확산시키고, 건설업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사의 51% 이상 직접시공제를 부활해서 부실공사와 비정규직 양산을 바로 잡을 것임
-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음
- ISO 26000 등 국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규범에서도 하도급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는 우리 경제에서 필수적인 방향임

### □ 주요 정책

###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구축

- 중소기업 학습고속도로
  -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 (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계한 인적자원개발(HRD) 클러스터 조성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강화에 따른 제도 구축
- 중소기업 수출고속도로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FTA 종합지원센터 구축
- 중소기업 금융고속도로
  -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위, 산자부기능 중 일부를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
  - 정부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간 일반경쟁의 기회를 확대하고 분리구매 강화에 의해 규모는 작으나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회 보장

- 정보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성 강한공중파방송을 설치
  - 공영방송에 중소기업전용시간을 확보
  -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원정사의 하청사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적 책임을 강화

###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4%에 달하고 골프장은 1.5%인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서 합리적 이유가 아닌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높은 수수료율을 1%로 낮춤
-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퇴 후 생활지원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실시된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제도)의 성공을 위해 초기 자금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할 것임
- 재래시장 살리기 추진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중소도시 입점경쟁에 따라 재래시장이 죽고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입점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래시장은 선진국형 복합 지역문화공간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임



##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2의 성장 엔진 육성”

### □ 현안 진단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환동해 경제협력벨트가 환서해 경제협력벨트와 함께 대한민국을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의 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6자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형성

- 6자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薰風)이 불고 있음.
-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불능화 프로그램과 남북정상의 각종 경제협력방안 합의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고, 북핵폐기와 북미수교를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임

#### ● 북·미 수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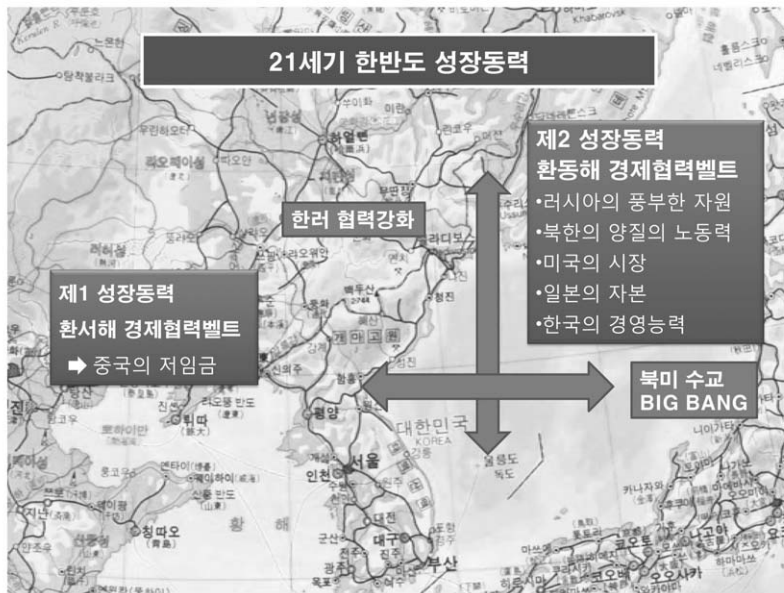
- 북미수교는 한반도에 빅뱅을 일으킬 것임
- 새로운 한반도 평화번영체제에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하는 새로운 제2의 강력한 성장동력을 만들 고자함

□ 비전과 전략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강대국들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의 중심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에 있습니다.”

● 강대국으로의 시장 진출

- 남북정상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로 우리 모두가 구상하고 있던 환서해 경제협력벨트의 서막이 열렸음



● 러시아 극동지방은 기회의 땅

-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극동러시아의 중심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시작될 것임.

□ 주요 정책

● APEC 회의(20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들.

●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2008년 추진)

- 2010년 '사할린~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카~속조' 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 까지 전력망 구축

-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동북아 물류허브)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석유 · 화학) 포함

-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
- 추진일정 : 2008년

##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투기거품을 제거하여 내 집 마련 기간을 단축”

### □ 현안 진단

“신도시건설이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끊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합니다.”

-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최소 2,500조원의 투기 거품을 키움
  -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정도로 주택가격 폭등
  - 주택보급률은 107%를 넘었으나, 자가주택 소유율은 60%내외에서 정체
  - 재건축, 재개발도 극심한 투기로 얼룩짐

### □ 비전과 목표

-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여 거품경제를 청산하고,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의 불안에서 나라경제를 구할 것임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내 집 마련을 1/4로 쉽게 함
-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 부터 정상화시킴

### □ 주요 정책

- 반의반값 아파트 등 문국현 아파트 100만호 건설
  -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신개념 아파트임.
  - 신도시 건설부패를 100%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공개하면 아파트가 반값이 됨 ; 거기에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반값
  -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포함해도 평당 4백만 원내외로 분양이 가능함. 이는 판교 신도시 분양가(채권 입찰포함) 1,800만 원대의 1/4 이하임.
  - 투기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하도록 의무화. 이런 업무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필요

- 1층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으로 디자인
-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도 문국현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매년 20만호씩 5년에 1백만 호 공급함. 이미 발표된 신도시로 부족할 경우, 행복도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 부기관, 공기업의 부지도 활용

### ● 신도시 공영개발

-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않음. 그렇게 하여 신도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함.
- 문국현 신도시는 가정친화형, 환경친화형 Green Way
- 투기의 가짜경제가 추방되고 사람이 대접 받는 신도시

### ● 월세형 영구임대아파트 지속적 건설

-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증세 분을 재원으로 서민을 위한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 건설
-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의 20%가 될 때까지 지속

### ● 재건축, 재개발도 투기배제형으로 추진

-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 허용
- 용적률 높이기는 전문적인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서 최소한으로 인정
- 도시재정비법을 재개정하여 무질서한 재개발 차단

### ●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 서울시의 경우처럼 50여개 항목에 걸친 상세 공개 즉각 실시

### ● 후분양제 전면 도입

- 일생 저축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로 소비자 보호

### ●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

-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 강화

# 건설비리 척결

## “건설비 거품제거로 연간 70조원을 국민의 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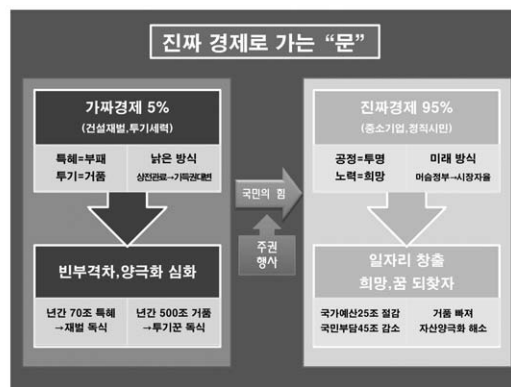
### □ 현안 진단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입니다.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을 걷어내고, 건설부패의 고리를 끊어서 95% 주권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진짜 경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은 거품 셈법**
  - 매년 개발사업은 200조원 규모임
  - 시장단가제 실시로 인해 재정사업, 민자사업,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매년 70조원 절약가능
  - 일본의 경우 1992년 시장단가제 도입으로 건설비용의 감소 효과가 입증됨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일반화된 제도임)
  - 한국의 경우 1995년에 도입했으나, 재경부는 시행하지 않음
- **건설부패규모 매년 70조원**
  - 건설사업규모는 연간 200조 원 중에서 특혜로 인한 부패 규모는 70조원임
  - 공공사업 : 최저가낙찰제 회피, 턱키납용, 대안입찰 등으로 15조원 특혜
  - 민자사업 : 사업비 부풀리기, 사실상 수의계약 등으로 10조원 특혜
  - 개발이익사업 : 무분별한 사업인가, 개발이익 사유화 등 40조원 특혜
  - 기타 민간사업 : 기업도시 등 5조원 특혜

### □ 비전과 전략

“건설비용 산정방식의 개선, 민자유치사업의 전면개편, 입찰제도의 개선, 직접 시공의무제 도입 등으로 건설부패를 척결하여 진짜경제로 가는 ‘문’ 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 건설부패척결로 국민에게 70조원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 건설사업규모 및 특혜청산 가능액 |      |           |      |      |     |                  |
|-------------------|------|-----------|------|------|-----|------------------|
| 구분                | 사업종류 | 사업특성      | 사업규모 | 적정액  | 특혜액 | 공무원 개입           |
| 공공                | 재정사업 | 국가정책 재정지원 | 50조  | 35조  | 15조 | 모든 단계 (재경부/지자체)  |
| 공공 + 민간           | 민자사업 | 민자유치 운영유치 | 30조  | 20조  | 10조 | 사업자선정 (예산처/지자체)  |
|                   | 개발사업 | 재개발/신도시   | 100조 | 60조  | 40조 | 인허가 업무 (건교부/지자체) |
| 민간                | 민간사업 | 공장/빌딩     | 20조  | 15조  | 5조  | 감독소홀 (건교부/지자체)   |
| 합계 (공공, 민간)       |      |           | 200조 | 130조 | 70조 | 모든 단계에서 막대한 영향력  |

|             |          |          |
|-------------|----------|----------|
| 특혜청산시 절감가능액 | 재정절감 25조 | 국민혜택 45조 |
|-------------|----------|----------|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한다면 70조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 가능 (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나머지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건설에 사용 예정.

□ 주요 정책

● 정책전환(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건설부패 제거정책     |           |           |
|---------------|-----------|-----------|
| 품셈방식 → 시장단가제도 |           |           |
| 재정사업          | 민자사업      | 개발사업      |
| 입찰제도 직접시공     | 독점계약 압축경제 | 공공주도 사업관리 |
| 예산절감          | 공정경쟁      | 투기억제      |

|                        |
|------------------------|
| 매년 70조 특혜 제거           |
| 국가예산 : 25조, 국민부담 : 45조 |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재정이 부족한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비교검증 후 국회동의 절차 의무화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민간사업자 선정 후 건설단계는 설계자·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 민자 사업자의 사업비용은 경쟁 입찰결과로 결정
- 기존 민자사업에 대해 불법행위 등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대안입찰방식 폐지와 그간 도입경위 전면 조사
- 턴키입찰은 선 설계경쟁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

● **30억 원 공사에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전체공공공사의 90% 이상적용)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화
-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가짜회사(미국은 Broker로 규정)에서 진짜건설회사로 바뀌어 경쟁력이 높아짐, 또한 기능인력 고용이 불가피해지고 인력양성에 자발적 참여 효과가 생김. 이공계출신 기술전문 인력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져 기술개발에 기여하게 됨.
- 저임금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 단절
- 2008년부터 원청(일반)과 하청(전문)의 겸업허용과 하청기업도 정부공사를 직접수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일감감소 우려는 없음.



## 조세제도 개혁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

#### □ 비전과 목표

- **인적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람경쟁력 제고**
- **근로자 학습유인을 제고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역량 제고**
  - 기계나 건물 등 물적자본의 경우 사용자비용(감가상각비) 전부를 손금으로 처리
  - 인적자본의 경우는 비용의 일부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반영
  - 배당이나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 되거나 비과세되는 등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
  -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막아 근로의욕을 향상
  -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득 파악 인프라를 개선, 탈루소득을 근절
-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춤.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업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현수준 이하로 유지**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땀 흘려 번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담세율은 현 수준 이하로 유지

#### □ 주요 정책

- **근로소득세 경감**
  - 과표 구간 확대와 세율인하 추진

● **교육비공제 확대**

-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와 인력개발 투자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연구와 인력개발 투자시에 사용을 강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 기업의 근로자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 **법인세 경감**

- 지방중소기업에 법인세 경감
- 이전 기업은 물론 기존 지방소재 기업에도 법인세 경감
- 참여정부 계획대로 최대 70% 경감함
- 대기업도 본사나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때, 법인세 경감 혜택 부여
- 과표 1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 ; 현행 과표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세율을 1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이하 15%, 100억 원 이상 25%로 세율을 조정하여 중소기업 우대
  - ; 2005년 총 33만개 법인 중, 법인세 과표 100억 원 이상 기업은 1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75%를 차지하였음.

● **임대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득세 내는 것 반드시 고칠 것임.
-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율 조사.
-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 ; 전세보증금(1억 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를 산출하여 과세
  - ; 일정액 이상(50만원)의 월세도 과세
- 임차인의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시 임차료 소득공제 허용
-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하여 매매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임대차계약 신고하도록 하여 세원 포착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강화**

- 공시지가통계를 정상화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 주택의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아, 과표를 현실화하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음.

## 재벌 개혁

### “재벌을 수치가 아니라 자량으로”

#### □ 현안 진단

“재벌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있지만, 부패를 조장하고 범법행위를 일삼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뇌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데는 소홀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불법과 탈법으로 경영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데 열심인 재벌을 개혁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재벌은 대부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 최근에도 드러났듯이 재벌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뇌물을 주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광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부패재벌을 찬양하는 학자를 키우며, 투명경영을 하는 경쟁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검찰, 법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불법을 일삼는 재벌총수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대우하고 있음.
  -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재벌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는 법을 어긴 전직대통령보다 법을 어긴 재벌총수를 처벌하기가 더 힘들.
  
- 그동안의 정부는 법 안 지키는 무법재벌 편이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실명제를 어긴 재벌을 봐줄 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제를 자의로 차단하고 있음.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관련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금감위는 ‘시장경제발전’이란 구실로 공공연히 집단소송을 방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불법 하도급 거래, 입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법 적용을 미루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하여, 많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래위원회’로 인식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는 재벌의 부패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정책을 펴서, 2,500조원의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연간 70조원의 부패자금을 헌납함.
  -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확대, 공익재단에 주식출연비율 확대, 출자총액제한 완화, 지주회사 타인자본 조달한도 확대 등은 재벌총수의 경영권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장치들임.

□ 비전과 전략

“8%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진짜경제를 위해서는 재벌의 불법과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재벌에게도 다른 중소기업이나 독립 대기업과 똑같이 실정법을 적용

- 이미 법제화된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여 분식회계를 어렵게 함. 이는 비자금 관행 사전 억제효과도 있음
- 금융실명제법 제대로 적용하면 비자금 운용 어려워짐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이 제대로 재판하고, 대통령이 법을 어긴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않으면, 재벌총수의 재벌비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임
-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하도급비리의 상당부분이 근절되며,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건설사를 법대로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면 재벌이 사라질 것임
-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제대로 징수

● 재벌 로비에 의해 제정된 특혜악법 모두 환원

- 재벌의 금융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불인정
- 재벌의 계열사 출자총액한도제 재강화
-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환원 등

□ 주요 정책

● 정부와 국회에서 무법재벌 장학생 추방

- 정부와 국회에는 무법재벌의 장학생이 다수 존재함
- 이들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등 관련법을 불법재벌총수에게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무법재벌의 정책로비를 받아 반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겠음.

● 무법재벌에게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

- 재벌 장학생이 아닌 자로 청와대, 검찰,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임명하여 법대로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로 총수 생존 시에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총수 사후에는 경영권 세습이 자동으로 보장되고 있음.
-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를 통해 직접 소유지분의 평균 7배의 의결권을 행사. 이는 '진짜자본 1에 가짜자본 6이상을 순환출자로 가공해 낸 것이므로 가짜자본주의' 임 (공정위 최근 발표: 11개 출자총액제한 대상재벌 평균 의결권 승수 7.5배)

-순환출자는 직접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정신에 위반되므로 법에 순환출자 금지를 명시

●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출연한도 확대 계획 백지화**

- 재벌의 기부문화 창달이 필요하면 현금으로 하면 됨.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재벌에게서 진정한 기부정신을 바라는 것은 재벌 장학생들의 속임수 논리임.
- 공익재단이 출연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공익에 사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대신 주식을 총수 의지 대로 의결권 행사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출연한도는 현행 5%를 유지하고, 20% 확대계획은 백지화

●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불인정**

-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허용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됨으로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하여 2008년 이후 조속히 의결권을 모두 불인정함.
- 순환출자로 인한 가짜자본과 금융계열사의 고객자금을 동원한 총수의 황제경영, 세습경영이 용이한 바, 그 잘못된 제도를 도입 · 유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담합 등에 의한 피해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함.
-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공정위의 직무태만이 드러나게 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건설 등 하도급거래에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 (금산분리 참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의 사회책임을 제도화시킴”

### □ 비전과 목표

- UN은 Global Compact를 통해 지구촌 경제인들의 윤리서약을 받음으로써 기업들이 인권, 노동권, 환경권 존중에 앞장서고 반부패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
- 2009년 말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6000 사회적 책임 지침을 제정해서 전 세계 무역과 상거래에 반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인바, 우리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비하도록 조치
- 우리 중소기업의 과반수가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하도급 비리의 척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추진

### □ 주요 정책

-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공개적 보고를 의무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대기업들의 현실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공개적 보고를 회계보고와 같이 의무화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현재 공정거래위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 비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에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정부 구매조달 심사 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적을 적극 반영**
  - 이미 선진국 정부들이 실시 중임

## 금산분리 유지 및 강화 “재벌의 은행지배 반드시 막는다”

### □ 현안 진단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과 재벌이 동시에 망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해 진짜경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의 은행지배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미 재벌의 금융회사 지배가 매우 심한 편임
  -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보험, 증권,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에까지 퍼져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이명박 후보 등 일각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체는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임
  - 이런 주장은 모든 재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삼성 등 특정 재벌을 위한 확실히 잘못된 주장임
- 제3의 금융위기 도래 위험
  - LG, SK 등 상당수 재벌이 지난 수년간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바꾸어서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처분하여 왔음
  - 한편, 삼성 등 일부 재벌은 정부정책과 반대방향으로 은행까지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짐
  -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한다면 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에 이어 제3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연구원,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장처럼 한국은 금산분리가 잘 안되어 있어 보험, 증권사를 재벌이 아직도 소유,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라경제의 큰 불안 요인임.

### □ 비전과 전략

“제3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금산분리 정책은 유지하고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 ● 재벌의 은행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현행 제도 유지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경우
  - 산업재벌은 은행 주식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은행법 16조), 이 4% 한도를 유지
  - 예외적인 경우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필요하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음.

- 금융자본의 경우(은행법 15조)
  -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자본은 10%까지 소유를 허용
  - 10%, 25%, 33%를 초과할 때, 각각 금감위 승인이 필요한 규정도 유지
- 선진국처럼 금산분리를 철저히 하여 나라경제에 큰 걱정거리를 없애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양극화 확대 위험성을 예방
- 사람중심 진짜경제에서는 산업자본은 금융에서 손을 떼고 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주요 정책

-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인 4% 유지**
  - 국내외 자본에 차별 없이 적용함
  - 의결권 없는 주식 보유는 현행대로 10%까지 감독당국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되,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하도록 함
- **재벌로 하여금 비금융사업에서 철수토록 함**
  -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고 싶으면, 신한, 하나의 경우처럼 금융지주회사를 세워야 하며, 비금융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함
  - 현행대로 10% 이상 은행주식을 소유해도 금융감독당국이 허용
-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2009년 2월 시행 예정)에 의해 신설되는 금융투자회사도 은행처럼 4% 소유제한**
  - 자통법을 개정하여야 함.
  - 산업재벌이 금융투자회사를 신설, 지배하는 일이 없어야 함
  - 독립된 형태,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
- **우리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 지분의 매각**
  - 조속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공모함.
  - 국민주 방식으로 해도 공적자금 충분히 회수 예상됨.



## 금융감독 정책의 혁신

### “금융시장안정, 경쟁력을 높이는 금융감독 체제 구축”

#### □ 비전과 목표

-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며 금융발전을 선도하도록 금융감독기관 혁신  
- 규제와 간섭이 아니라 자문과 보호로 주 역할 변경
-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금융문화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금융 소외지역을 해소
-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  
-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의 해외진출을 촉진

#### □ 주요 정책

- **관치금융척결을 위하여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민간공적기구화**  
- 금융감독 규정을 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하며,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강화와 함께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감독제도 도입**
- **투자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내실화 및 집중투표제 확대, 집단소송제 활성화 추진**
- **효율적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 금융감독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 **금융감독 시스템 운용방식의 개선**  
- 연계감독(cross-checking)시스템 강화  
- 분권화를 통한 간접감독 확대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금융규제의 통일성 제고

● **금융감독 전문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적기 시정조치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
-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조체제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중소기업의 금융조달 창구를 확대”

#### □ 비전과 목표

-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현재 전적으로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금융조달 구조로 바꾸는 금융조달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신주식시장을 발달시켜 시장규율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벤처캐피탈을 활성화 하며 벤처 캐피탈 산업을 발달시켜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지원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

#### □ 주요 정책

-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을 활성화**
  - 중소기업 투자자의 탈출기회를 높여 직접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신규증권업 특별인가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증권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신시장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상세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투자자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도록 함
  - 시장 규모는 1000개 기업으로 시작하여 5000개 기업으로 확장
- **산업은행을 중소기업 벤처캐피탈의 사령탑으로 전환,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보류**
  - 중소기업 금융조달 구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전담은행을 설립**
  - 창업과정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로 종자돈을 지원하며 대출자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
- **자영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신용카드제도를 개선**
  -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도출하고 차별 금지를 법제화

## 사회적 합의하에 FTA 추진 “FTA를 세계시장에서 성장동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

### □ 비전과 목표

-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되,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결 확대
-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피해가 보상되는 대책 추진

### □ 주요 정책

- **한미FTA의 국회 비준은 차기 정부 · 국회에서 추진**  
- 내년에 북핵문제 해결,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빅뱅’에 맞추어 개성공단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 해결 추진
- **추가적인 FTA는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경제와 보완관계가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우선적으로 추진**
- **(가칭)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  
-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국회 내에 농민, 노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
-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FTA 무역조정기금을 설치**  
- 제조업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과 근로자 지원법)과 FTA이행법(농업부문지원법)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FTA이행지원 통합법을 제정하여 지원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고용차별을 타파하고 지식노동 추진”

### □ 비전과 목표

- 2년 내지 3년을 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화하도록 해서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실현

### □ 주요 정책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현재보다 1/2수준으로 대폭 축소**
  - 현재의 2조 2교대,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3조 3교대 또는 3조 4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는 ‘차별 철폐기구’를 설치
  -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력개발의 비전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비정규직 함정을 극복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비정규직의 1/5만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확대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및 대부제도 도입
  -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분배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여 능력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2006년 36.3% → 2010년 80%)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 모색

## 사회적 대타협 추진 “사회의 갈등 문제와 국가의 미래과제 해결”


### □ 비전과 목표

- 일자리 창출, FTA 체결,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등 국가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도시와 농어촌부문간, 수출과 내수부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류층과 중산층·서민층간에 발생하는 양극화된 구조와 사회갈등 극복

### □ 주요 정책

-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
  - 사회적 대타협에 노·사·정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
  - 산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센터」를 설립, 체계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 조정
- **노사발전재단의 기능과 역할 확대**
  -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주요 노동 문제들을 논의할 기구로서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

# 교육\*

 “균등한 교육기회와 창조적 교육을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야  
력

##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교육 기회균등 극대화와 창조교육을 통해 교육강국 실현”

### □ 현안 진단

“학교는 시험을 대비하는 곳도 아니며, 경쟁을 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학교는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는 곳이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에 근본을 두어야 합니다.”

#### ● 공교육의 불신 만연

- 국민의 교육 불만족도 75% 정도  
교육 만족도 20% 이내
- 공교육 불신으로 인한 사교육 지출액 연간 30조원
-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살림살이를 쪼들리게 함
-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낭비의 악순환임

### □ 비전과 전략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창조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 창조적인 인재 지향

- 학교는 시험을 대비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력을 키우는 곳임
- 암기형, 단기성과 지향형인 입시교육과 사교육으로는 창조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없음
- 공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할 것임

#### ●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훈련

- 학교는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임
-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인, 소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임



□ 주요 정책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무상교육 확대
  - 유아 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함
- 3不 정책 유지
  - 대학별 본고사 · 고교 간 등급제 · 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의 근간을 유지할 것임
  - 국가학력 평가제로 상향평준화 유도
-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시행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 제정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세계화와 맞물린 지역화를 추진할 것임
  - 대학을 '실용학습 지식문화' 로 혁신하기 위한 대학생 경쟁체제 유도 및 지원
    - : 24시간 도서관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로 글로벌 상아탑으로 유도
-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
  -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주의 완화
-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
  -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
-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국공립대 학생 50%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립대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시 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
- 초중고 교육여건을 개선
  -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OECD 수준인 2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전면 실시
  - 학교간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습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실시
  -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소통하며 함께 사는 법을 교육
- 대학입시제도와 내신제도를 혁신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
  - 내신의 혁신을 위해 단순암기, 지필고사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논술형' 으로 대체

■ 예체능 교육을 혁신하고 활성화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
- 기본적인 예체능은 학교에서, 추가적인 예체능은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에서 전담하여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
- 기존 사회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리더십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사회성 체육교육을 강화

■ 국어·국사교육을 강화 한 후, 영어조기교육 확대 실시

- 우리말과 역사를 제대로 익힌 후에 영어조기교육을 실시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 내의 영어교육은 물론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짐.
- 훌륭한 영어교사 육성을 위해 전국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통역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중학교부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

■ 교사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사범대, 교대를 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임용 이후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창조적 교사 육성기관으로 전환
- 교원임용고시를 폐지하는 등 교원임용제도를 개방하여 교사들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약  
역

## 사교육의 대폭축소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 □ 비전과 목표

- 정부교육예산(2007년 31조원)보다 더 많은 33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사교육 시장에서 지출되는 문제 해결
- 공교육을 살려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학부모의 근심을 경감

### □ 주요 정책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농산어촌 지역·전문계고 우선 실시)
- **3분 정책의 근간유지** (대학별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 입학제 금지)
  - 다만, 학교에 대한 국가 표준학력검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상향평준화 구현
-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실시**
  - 기초수학, 국사, 생활영어, 컴퓨터 활용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지겠음.
    - ▶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립
-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charter school) 확대**
  -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300개까지 확대(30% 수준)하여 공교육의 다양성 실현
- **자사고·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 초·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존 자사고·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 등 방과후 교육 확대
  - 각 시도에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
- **농산어촌,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학생교육권 강화**
- **저소득 낙후지역 학교중심 1사(社) 1교(校) 운동 확대**

야  
며

##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입제도개혁, 입시고통 줄이기”

### □ 비전과 목표

- 대학진학 경쟁이 초중등교육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소수의 명문대·명문고를 정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고 있는 현실 개선
-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가정의 ‘고통’을 덜고, 아이들을 골고루 선발하여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

### □ 주요 정책

####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 1단계 : 교육과정 운영 시범실시 (교장공모형 학교와 특성화 학교에 우선운영)
  - 2단계 : 일반 고등학교에 확대실시
  - 3단계 : 대학의 학생선발에 반영

####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대학간(단관대 포함) 협약을 통해 실시
- 대학간 협력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약  
역

## 교원사회 경쟁력과 신뢰제고 “신뢰받는 교원사회 만들기”

### □ 비전과 목표

- 열악한 교육환경과 별도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교원의 자질 향상
-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

### □ 주요 정책

####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전문성 강화: 교원의 교육 기획권 확대, 교과중심 업무 편성, 교원 연구년제 도입
- 책무성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인사 및 구조조정 활용 반대를 전제로 함)

#### ● 교원양성 체제 개혁

- 교원임용고시 폐지
- 초중등교원의 양성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

야  
력

##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세계적 수준의 지방 대학 육성”

### □ 비전과 목표

- 세계 500위권 대학 20개를 양성하고 20개 대학에서 향후 5년간 10만 명의 세계적 프론티어 양성  
- 현 1만5천 명 수준의 핵심인재를 새로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
- “사람입국 창조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육성  
- 맥켄지 컨설팅의 CEO 굽타, “세계는 인재전쟁 중”

### □ 주요 정책

- **고등교육 예산을 GDP 대비 1% (9조원)로 확대**  
- '07년 기준 고등교육 예산은 3.4조원(GDP 대비 0.4%)에 불과
- **지방대학발전 특별법 제정**  
- 권역별로 20여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10만양병 프로젝트’를 추진  
- 향후 20년내 KAIST,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육성  
- 이를 통해 매년 2만여 명의 핵심인재를 양성
- **정부지원 확대 및 지자체 및 민간의 대학투자과 대학자체의 수익사업 활성화**  
-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원의 수를 확대  
- 산학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적응력과 창조적 능력을 배양

## 글로벌 환경에 부응한 교육 강화 “세계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정착”

### □ 비전과 목표

-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

### □ 주요 정책

#### ● 글로벌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영어 · 중국어 · 일어 등 외국어 조기교육 전면시행(초등학교 1학년부턴)
- 학생과 교사의 국제교류 확대

#### ●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아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범교과 프로그램’ 운영
- 각 시 · 군에 다문화 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

#### ●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단계적 축소
- 학교 숲을 조성하고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전환

야  
녀

## 교육자치의 실천 “주민자치의 원리가 숨 쉬는 교육행정 구현”

### □ 비전과 목표

- 주민이 통제하는 ‘교육자치 실현’ 을 목표로 교육기관을 학교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 □ 주요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 개편**
  - 교육부는 노동부와 통합하여 평생학습부로 개편
  - 교육행정에 의한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 교육과 학생지도에 지역사회 전문가, 학부모,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참여 확대
- **국민참여 교육개혁기구 설치**
  - 교육정책 만족도 수시 평가 및 결과 공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 산학연계형 직업중심대학 육성 “직업교육 중심의 대학교육 강화”

### □ 비전과 목표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해 산업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산업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폴리텍 대학 등이 산학연계형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재편하되 소수의 연구중심의 대학을 제외한 대학(300여개)은 직업중심대학으로 개편
  - 직업중심대학은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실직자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정부 지원 강화

### □ 주요 정책

- ‘1 대학 다수 캠퍼스’ 체제를 활성화
  - 학사운영은 법률상 단일대학으로 하고 통합에 참여한 각 단위는 대학의 지구별 캠퍼스 체제로 운영
- 지역내 전문가의 대학교육 참여 유도
  - 기존의 대학별 교수진을 포함하여 50% 이상의 교수진을 지역 내 전문가(명장, 기능장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운영 유도
- 지역 교육자문회 구성
  - 지역 내 업종별 단체, 지역단위 소기업협의회, 자영업체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 단체를 포괄하여 구성

야  
력

## 국민의 영어 및 국제 언어 능력 향상 “공교육으로 전 국민 2개국어 구사 방안”

### □ 비전과 목표

- 전 국민이 공교육만으로 2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인력의 양적·질적 확충을 하고 영어 및 외국어 무상교육을 확대
- 국내 영어교육 환경과 질을 향상시켜 기러기 아빠의 수를 감소
  - 10년 내 학생 1만 명당 조기유학생 수를 2004년의 1/2수준(즉, 학생 1만 명당 조기유학생 수를 초등학교 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명)으로 축소
- 10년 이내 한국의 영어수준을 홍콩수준(아시아 11개국 중 3위)로 향상
  -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10년 이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및 R&D 센터를 국내에 100개 이상 유치

### □ 주요 정책

- 영어교사를 3배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3배로 확대하며 교대생의 영어수준도 대폭 증진
- 영어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수학과정을 대폭 개편하고 한국판 Tesol(K-Tesol)을 도입
  - ▶ K-Tesol은 나이, 성별, 국적차별 없이 개방하되, 자격미달 교사(원어민포함)를 여과하고 유능한 교사우대
- 영어교사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영어교사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적 이해향상 교육도 함께 실시
- 의무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을 늘리고, 영어교육과정에 문화적 이해도 함께 병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
  - 교과과정에 바디랭기지와 영어적 사고 배양 포함
  -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 발표 및 토론 수업을 주당 2시간 이상 의무화
- 해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개발
- 영어권 멀티미디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EBS 등을 통한 영·미 교과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 평생 학습기반 구축 “평생학습을 통해 고용 보장”

### □ 비전과 목표


- 일 중심의 기업조직을 일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학습기업으로 전환
-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20%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향상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장을 학습조직화
- 이를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학습을 통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체계 구축

### □ 주요 정책

-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투자 확대**
  - 5년간 평생학습 예산으로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되, 이중 5조원은 중소기업 부문에 특화
  - 예산은 건설부문 부패근절을 통해 얻는 연 25조원의 정부예산 절감분과 고용보험기금 10조원에서 충당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학습고속도로”를 구축**
- **학교졸업 이후 인생 2기의 학습체제에 대해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
- **개인훈련휴가권 등 제도개선**
  - 장기근속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개인훈련휴가권을 부여
  - 실업급여 수급자를 교육훈련휴가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 ▶ 교육훈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 **인적자원개발(HRD)과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계한 R&D 및 HRD 클러스터 조성
  - 대학이 근로자평생학습 중추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중소기업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실적과 연계



# 복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